

“반갑다 야구야” 시범경기에 챔스필드 꽉 채운 관중



휴일이자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17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시범경기가 열린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 많은 관중이 찾아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

▶관련기사 20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공공임대주택정책 ‘주거빈곤’ 부채질

지자체, 정부 지원금 맞춰 턱없이 좁은 24.42㎡ ~ 29㎡ 공급
 광주 대기자 3000명 넘는데 빈 아파트 686호... 주거난 가중

‘영터리 공공임대주택정책’ 탓에 영세민, 서민들마저 지나치게 좁은 광주의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를 외면하면서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임대아파트 700채 가까이 비어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가 기존 면적과 호수를 정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건축비에 크게 못미치자 ‘할당’된 공급 호수를 채우기 위해 면적을 대폭 줄이면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이다.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획일적이고 근시안적인 임대주택정책 탓에 영구임대아파트는 집주인을 찾지 못하고, 영세민은 살 곳을 마련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영구임대아파트만이 아니라 공공임대아파트 모두 공급호수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면적을 줄이면서 서민 주거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분양에 들어간 남구 주월빛어울촌 영구임대 288세대 가운데 21세대에 입주희망자가 없어 추가 모집에 들어갔다. 새 아파트인 주월빛어울촌 뿐만 아니라 광주도시공사의 쌍촌, 하남, 금호 등의 영구임대아파트 175호, LH의 하남1, 각화, 오지1, 두암2, 두암4, 효천1 등의 영구임대아파트 511호 등 무려 686호가 빈집으로 남아 있다. 대기자는 3357명에 이르고 있으나 비어있는 아파트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빈집은 모두 영구임대아파트 면적 기준

인 12.5평보다 작은 것은 물론 국토교통부가 정한 4인 가구 최소한의 주거면적(43㎡)보다 턱없이 좁은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빛어울촌의 경우 집주인을 찾지 못한 21세대는 모두 면적이 29㎡로, 8.77평형이었다. 122호가 비어있는 광주도시공사 하남 영구임대아파트 면적은 24.42㎡, 198호의 집주인이 없는 LH 하남1 영구임대아파트 면적은 26㎡에 불과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면적이 최소한의 주거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인은 정부의 비현실적인 공공임대아파트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호수를 정해 건축비의 85%를 지원하며 지자체에 ‘할당’하고 있으나 지원금액이 실제 건축비는 물론 정부가 정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보다 낮은 것이 현실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정부 지원금에 맞춰 할당 공급호수를 채우기 위한 교육직책으로 임대주택의 면적을 줄이면서 사실상 원룸 수준의 영구임대아파트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광주지역 영구임대아파트 14개 단지 1만5370호 가운데 3439호만 간신히 국토교통부가 정한 4인 가구 최소한의 주거면적(43㎡)을 넘어서고 나머지 1만1931호(77.6%)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만이 아니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대다수가 이 같은 불합리한 정책 탓에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취지로 하고 있는 행복주택 역시 광주의 경우 정부가 정한 면적기준(15.6평)을 대부분 밑돌고 있다. 1200호 가운데 754호가 8~10평에 불과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비좁은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은 계속되지만 수요가 없다는 문제를 국토부에 계속 제기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지자체 부담인 15% 예산도 마련하지 못해 임대보증금으로 채워야 하는 현실에서 영세민들의 주거복지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선거법 패스트트랙 ‘급물살’

여야 4당, 지역구 225·비례 75석·연동률 50% 잠정 합의

한국당 “결사저지” 반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은 17일 국회에서 만나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4당 간사들은 잠정 합의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처리 일정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4당은 합의안에 대해 이번 주 안에 각 당의 추인을 받은 뒤 해당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합의안 처리에 나설 태세다. 하지만,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결사저지’를 외치고 있다.

앞서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는 지난 15일 만나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단위의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의석수 총합이 75석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당별 비례율을 조정해 의석수를 줄여 75석에 맞추도록 하는 부대조항을 달기로 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배분한다.

A 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을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해야 한다. 60석 중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50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연동률을 100%가 아닌 50%로 결정한다면 25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한 ‘선배 분’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당별로 확정되면,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중 확정된 비례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각 정당은 이렇게 전국 정당득표율을 통해 확정된 최종 비례대표 의석수가 각 정당별로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커 정당별로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수 총합이 75석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당별 비례율을 조정해 의석수를 줄여 75석에 맞추도록 하는 부대조항을 달기로 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탄력

전남도, 국비 190억 확보

나주 혁신도시에 수영장·문화공연시설 등을 갖춘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총 사업비 490억 원 중 190억원을 국비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17일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에 따르면 빛가람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추가 확보에 힘을 쏟은 결과, 총 사업비 490억 원 가운데 국비 190억 원을 확보했다.

빛가람복합혁신센터는 나주시 빛가람동 199번지 5000㎡ 부지에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다. 1·2층 수영장, 3·4층 문화체육공연시설, 5층 창업공간, 6층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수영장·문화공연시설 등 문화시설 확

충에 대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으나, 지방비 부담이 커 좀처럼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오는 5월 타당성조사 등이 끝나는 대로 연내 설계 발주하고 내년 본격 시공을 추진, 2021년 초 준공 예정이다. 다만, 지방비 300억원 확보가 걸림돌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비 분담과 관련,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윤영주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은 “더 나은 정주 여건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빛가람복합혁신센터가 조기 건립되면 그동안 10개 혁신도시 중 최하위였던 정주여건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안전띠는 생명이야!

안전벨트 매기를 생활화 합시다.

습관이 되지 않아 안전벨트를 아직도 착용하지 않으시나요?
단, 1초만 실천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